

# 與 “국민 납득할지 지켜보아야”... 野 “특검 통해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 추가조작 불기소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성립

민주당 “檢 김건희에 면죄부 상납  
김 여사 앞에서 사법질서 무너져  
면죄부 처분, 특검 기폭제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수사 일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조대진,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10월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등에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
2021년	10월8일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검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2월3일	검찰, 권오수 전 회장 구속 기소
2023년	2월10일 1심 법원, 권오수 전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1심 법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추가조작 가담 인정
11월16일	검찰,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 의혹에 “형소심 진행 상황 보며 관련 수사 진행 중”
2024년	5월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 “김건희 여사 수사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취할 것”
7월20일	검찰, 김건희 여사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작 10시간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 ‘패싱 논란’
9월7일	검찰, 윤석열 대통령 정무 최은순씨 비공개 소환 조사
9월12일	형소심 법원,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선고 방조 혐의 추가된 전우 손모씨, 1심 무죄-형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10월16일	검찰,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관련 레드팀 회의 진행
10월17일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

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metroseoul.co.kr

## R&D 혁신에 AI 활용... 600개 프로젝트 추진

(2030년까지)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AI+R&DI 추진전략’ 발표  
기술혁신 시간·비용 30% 절감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030년까지 기술 혁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화 매출을 40%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50%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개최하고 ‘AI+R&DI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AI+R&DI’는 AI를 산업현장의 기술개발과 혁신 과정에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혁신 방식이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CEO를 포함한 두 명이 AI를 활용해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의 ‘AI+R&DI 추진전략’은 ▲AI를 적용한 기술개발의 확산 ▲AI를 통한 전세계 기술 및 인재 탐색 ▲정부 R&D의 기획-평가-성과관리 과정에 AI 전면 적용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는 AI를 연구설계와 실험수행에 적용하는 기술개발 방식을 산업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600개 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국타이어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통상자원부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R&D 과제의 100%를 투입한다.

AI기술을 활용해 특허, 논문, 실험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방향 설정, 연구설계, 가상실험, 결과예측을 수행하는 AI기반 연구설계 솔루션을 개발해 확산해 나간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설계 솔루션 10개와 개별 기업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90개를 2030년까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수가 많은 소재 분야의 물질 데이터를 20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1000만건을 구축하고, 연산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AI+R&D’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 이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R&D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AI를 기술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AI+R&D 트랙’을 신설하며, 과제 평가 시 반드시 2인 이상의 AI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 세계에 흩어진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자원을 AI를 통해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 플랫폼을 구축, 관련 생태계

도 육성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특허 1억 1000만건, 논문 2억 2000만건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형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202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인재와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과 인재 정보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정부 100억원, 민간 61억원 등 16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사업의 전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해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기업·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AI는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연구 데이터 관리-연구노트 기록-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제공한다. 또한, AI는 연구계획서를 요약하고 형식 요건 충족 여부 및 중복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정한 평가를 지원한다. 기술 개발 완료 후에는 특허 가치, 산업 경쟁력 기여, 사업화 성과 등을 분석해 제 공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

##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 ‘역대 최고치’

중소벤처기업위 김정호 의원  
민간 LNG발전사 영업이익 1.8조 기록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LNG발전사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공사 미수금(주택난방용) 미수금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무려 71배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63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15.5%에 달했다.

반면, 2023년 전체 4412만톤에서 민간은 937만톤(21.2%)을 도입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2022년도와 같이 현물가격이 높을 경우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도입량을 늘렸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한 셈이고, 그만큼 가스공사는 고가 현물 구매를 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3년 1조8653억원으로 3년 사이 254%(1조1322억원)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가스공사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14조3718억원으로 불었다. 연이자만 8000억원에 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 효과 상쇄

>> 1면 ‘기준금리 인하에도...’서 계속

실제 이달에도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대출금리를 최대 0.25%p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1~0.45%p),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2%p)를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전세대출과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를 0.5%p 축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차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는 10월 코픽스에 반영되지만 대출금리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있어 금리인하 효과는 상쇄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연말로 가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턴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